

## [상황]

### **아프카니스탄 난민에**(출처 : 전북도민일보, 2021.8.24.)

난민을 국어사전은 ‘전쟁이나 이념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를 피하고자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 전쟁·정치·종교·종족 박해를 피해 고향이나 조국을 떠나는 사람이 난민이다. 인류는 국가 간·인종 간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으로 투쟁하면서 발생하는 난민의 역사는 유구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난민 생활을 해온 민족은 유대인이다.

▼ 이집트인들의 박해에서 탈출, 로마인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2천여 년 동안 난민 생활을 해 온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난민 생활에서 벗어났으나 정착 이곳에서 1천400여 년간 살아온 팔레스타인인들이 난민 신세가 되기도 했다. 난민은 내전으로 인해 이라크·시리아·수단·유고·르완다·베트남·아프카니스탄 등 많은 나라에서 계속 발생하고 또 계속되고 있다.

▼ 최근에는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장악 등으로 수많은 난민이 피난처를 못 찾아 헤매고 있다. 특히 탈레반의 잔혹한 보복과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면서 조국을 탈출하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는 외신이다. “아기라도 살려달라”고 호소하면서 갓난아기를 철조망 너머 외국 군인에게 던지는 젊은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는 등 혼란과 공포 분위기라고 한다.

▼ 하지만 이들 난민 보호를 위해 선뜻 받아들이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 일부는 난민과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난민을 꺼리는 정서가 깔려있다. 그러나 우리도 피침·수탈로 피난과 유랑으로 얼룩진 난민의 역사가 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아프간 난민에 대해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난민'이 아닌가(출처 이데일리, 2021.08.28.)

###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장기체류 허용

26일 아프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378명(13명은 후발대로 한국에 올 예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들어오는 것인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미국 국방부 브리핑이 보여주듯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으로부터의 박해 위험에 처해있는 아프간인들을 보는 시선은 난민이다. 우리처럼 자국민들과 함께 일한 아프간인들을 자국으로 수송하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도 이들을 '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특별기여자라는 호칭은 이들이 비(非)난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7~8년 아프간에서 한국정부, 코이카(KOICA) 등과 함께 아프간 재건에 함께 노력했던 '조력자'라는 점을 강조해 이번 구출이 단순히 인도적 차원이 아닌 동료에 대한 의리이자 도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이번 구출작전이 '난민 수용'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고도의 정무감각이다. 이번 아프간 391명 입국에 한국 입국에 맞춰 법무부는 특별기여자 지위로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기여자에 맞는 체류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없는 법'까지 만들며 이번 입국이 난민 아닌 조력자들을 받아들이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아프간 난민에 대한 찬반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알앤씨치가 지난 23~26일 MBN·매일경제 의뢰로 실시한 국제사회의 아프간 난민수용에 대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9%포인트)에 따르면 찬성 27%, 반대 31%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한국 정부와 관련됐거나 전문직 위주 선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로 나타났다.

### 난민 수용률 1% 저조...선진국'으로서 역할·책임 보여야 할 때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난민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이 난민에 대한 포용력과 이해의 깊이가 넓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난민 신청자 수는 6684명이며, 이 기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이었다. 1% 수준의 수용률인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는 ‘선진국’ 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해질 것이란 점이다. 영국 출신의 한국 프리랜서 기자인 라파엘 라시드는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트위터 계정이 지난 6월 13일 올린 G7 정상회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선진국 클럽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좋아한다” 며 “그러나 과거 한국을 도왔던 난민이나 아프간 등 국제적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고 비판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법무부가 여러 중동 전문가를 고용해 난민 심사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난민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규모가 G10 수준까지 커진 상황에서 난민 대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책무” 라며 “정부 역시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 고 강조했다.

#### [문제]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카니스탄 수도를 점령한 이후 아프칸 난민을 포함 중미 난민, 위험에 처한 위그로족, 홍콩 난민, 미얀마 반체제 인사 및 로힝야족 난민등 전세계는 난민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난민 수용율은 1% 이내로 저조하다는 비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귀관은 난민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난민심사 및 국내정책관련 의견을 제시하시오.